

김병준부총리 거취 진통

청와대 결정 왜 미뤘나

여론 수렴 통한 사퇴 명분쌓기?

“논문 의혹 상당 해소 진상규명 시간 필요” 한총리 “여론 수렴 대통령에 건의하겠다”

당초 1일 판가를 날 것으로 예측됐던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거취 문제가 1~2일 늦춰질 전망이다.

김 부총리가 국회 교육위 회의에서 완강히 논문 관련 의혹을 부인한 데 대해 청와대 측이 좀 더 심사숙고해서 판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즉 노무현 대통령이 김병준 카드에 아직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논문 의혹에 대한 국회 교육위의 검증 결과와 관련, “부도덕하고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이날 회의를 통해 김 부총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고,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이 잘 된 것 같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같은 청와대 관계자들의 반응은 논문 의혹과 관련, 여론을 배제한 사실관계 측면만으로 놓고 볼 때 김 부총리가 사퇴할 만한 결정 사유가 없으며 이에 따라 사퇴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교육위 종료 후 ‘보도자료참고’를 내고 “그간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일련의 의혹에 대해 실제적 진실을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다고 본다”며 “의혹 논란에 대해서는 먼저 정확한 진상 규명이 중요하다는 일관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한명숙 총리도 당과 당사자, 대통령과 협의하는 의견수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김병준 부총리의 거취 문제에 대한 의

견 표명을 유보했다.

한 총리는 지난달 31일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가진 데 이어 당·정·청 지도부와 대책회의를 갖고 사퇴 불가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국회 교육위 전체 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결단을 실행으로 옮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 이후 “교육위를 통해 의혹이 상당 부분 해명됐다. 그러나 김 부총리의 거취 문제는 이미 정치적 이슈화한 현실을 감안, 각계 여론을 수렴해 대통령에 건의하겠다”며 전날보다 한 발짝 물러선 듯한 입장을 내놓으며 최종 선택을 뒤로 미뤘다.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가 청와대 내부 기류와 김 부총리의 입장을 감안했다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김병준 부총리의 사퇴라는 궁극적인 결과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정치권은 관측하고 있다.

청와대와 총리실에서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여론 수렴을 통한 명분쌓기’이란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미 결심은 굳었지만 가급적 김 부총리의 자진 사퇴를 유도함으로써 김 부총리의 ‘마지막 체면’을 살려주는 동시에 해임건의라는 극단적 수단에 기대는 무리수를 피해보려는 포석이 깔려있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 김 부총리의 결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 총리가 해임 카드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1일 국회 교육위에 출석, 논문 표절 및 중복게재 의혹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일 김대중 도서관에서 한화갑 민주당 대표와 조순형 상임고문 등 민주당 지도부들과 함께 서재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北에 일방적으로 갈 생각 없다”

DJ, 민주당 지도부 접견

김대중 전 대통령이 1일 민주당 주요 당직자들과 만나 “북한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손해 볼 것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북한에 일방적으로 방문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동교동 김대중 도서관에서 7·26 재보선 당선 인사차 방문한 민주당 한화갑 비상 공동대표와 조순형 상임고문 등을 만난 자리에서 최근 북한 미사일 사태 해결을 위한 ‘DJ 방북설’에 대해 이처럼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와 관련해 “이 일에 소박 치고 좋아할 사람은 미국과 일본의 강경파밖에 없다. 미국도 북한을 지혜롭게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한반도 전쟁은 단호하게 막아야 하는 만큼 대미관계가 악화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고 이 자리에 배석했던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이 전했다.

김 전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 “이라

크 전쟁에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병하고 있고 미 2사단 후방배치에 동의하는 등 (우리 정부가) 해줄 것 다 해줬는데 (미국으로부터) 대접받을 수 있는 관계가 돼야 한다”면서 미국과의 동등한 관계 설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은 또 “미국이 경제제재를 할 경우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부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미 제국주의 때문에 고통 받는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미국이 체제를 보장할 것이고 경제지원을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신의 방북 문제에 대해 김 전 대통령은 “북측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해야 (북한에) 갈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일방적으로 갈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무리한 방북은 양측의 입장을 확고히 한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은 조 상임고문의 7·26 재·보궐 선거 당선을 축하한 뒤 “당, 선진(조병옥 박사), 본인에 대한 평가가 겹겹이다”며 “계속 선거가 있을테니 잘 해나가기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이제는...” “아직은...”

차시장 화해 손길 광주 일부 국회의원들 거부

박광태 광주시장이 그동안 갈등을 빚어온 광주지역 여당 국회의원들에 화해 제스처를 보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박 시장의 화해 제스처의 배경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어 단시일내에 양측간의 갈등이 풀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1일 광주시 관계자는 국회 의원회관 내 광주지역 의원실을 방문, “광주시장과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광주지역 현안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는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지역 여론을 감안해서라도 소모적 갈등은 해소돼야 한다는 것이 박 시장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는 양측간에 할 말이 많은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마냥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해, 박 시장측의 화해 의사를 전달했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와 관련 광주지역 국회의원 및 보좌진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며 광주지역 의원들과의 회동도 계획하고 있다”며 “광주의 현안사업을 위해서라도

광주지역 의원들이 보다 폭 넓은 자세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이 이같은 화해 제스처를 보낸 것은 광주지역 의원들과의 갈등 장기간에 따른 지역 현안사업의 차질을 우려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광주시의회 원 구성과 관련한 파문도 진정되고 민주당 중앙당과의 불

협화음도 오는 11일 개최되는 당정협의를 계기로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기회에 광주지역 의원들과의 관계 개선에도 나서겠다는 박 시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광주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은 광주시 관계자의 방문 자체를 거부하는가 하면 박 시장의 화해 제스처가 법적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나타내고 있어 양측간의 갈등이 쉽게 봉합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광주지역 모 의원은 “예산 협의는 예산 협의고 법적 문제는 법적 문제”라며 “이번 기회에 과연 누가 잘못했는지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의원 25명 영입 불가 29명은 선별 영입”

국회 기자실 신당 창당 관련 괴문서 유포 논란

최근 국회 기자실에 소위 ‘해쳐모여식’ 신당 창당시 영입 배제 대상자 명단이 적혀 있는 괴문서가 배포돼 논란을 끌고 있다.

이 괴문서에는 당시 민주당에서 분당, 열린우리당 창당을 주도했던 정대철, 김원기, 정동채, 장영달, 천정배, 신기남, 정동영, 이해찬 의원 등 25명에 대해서는 영입을 완전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한 당시 신당 추진 모임에 가입하고 통합신당 창당에도 서명, 소위 양다리 걸치기를 시도한 김태홍, 김근태, 임종석, 이

낙연, 강봉근 의원 등 29명의 의원들에 대해서는 선별 검토를 통해 영입에 나서야 한다고 적혀있다.

이기에 통합신당 창당에만 서명할 조순형, 김효석 의원과 정철기, 추미애, 함승희, 김경재 전 의원 등에 대해서는 선별 검토 후 영입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이같은 내용은 민주당 주도의 해쳐모여식 정계개편이 이뤄질 때 가능한 것으로 현실적으로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Do you think it is Possible?

이 책은... (text describing the book's content and availability)

침하된 구조물복원 및 인역지반 강화공법의 신개념

우려적 공법의 특징

- 국내 최초 30%까지 절감비용
- 4월 15일 최단시간 시공 완료
- 기존 시설물 및 생활환경 보호
- 동등 품질 기준 준수

우려적 공법의 적용범위

- 기존 시설물 보수/정비
- 도로, 교량, 터널, 지하철, 지하철역, 지하철역사, 지하철역사, 지하철역사
- 도로, 교량, 터널, 지하철, 지하철역, 지하철역사, 지하철역사

우려적 공법의 적용범위

- 도로, 교량, 터널, 지하철, 지하철역, 지하철역사, 지하철역사
- 도로, 교량, 터널, 지하철, 지하철역, 지하철역사, 지하철역사